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기 대한부인회(1949~54)의
정치적 자율성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송 지 윤

초기 대한부인회(1949~54)의
정치적 자율성

홍 석 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송 지 윤

인 준 서

송지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초기 대한부인회(1949~54)의 정치적 자율성을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자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한부인회가 했던 여권신장 활동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

1949년 2월 독립촉성애국부인회와 서울시 부녀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대한부인회는 1950년대 우익 여성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대표적인 단체이자, 정부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였다. 초기 대한부인회의 활동 시기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 한국 사회를 극도의 궁핍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며, 국가가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내면까지 통제하는 상황을 낳았다. 전쟁은 여성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 여성들을 전쟁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우경 보수화된 남성 중심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자각을 하고, 사회에 대응해 나갔다.

이 시기에 이승만 정권은 대중 단체를 동원하여 정권 강화와 안정을 꾀하였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예속단체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 초기라 할 수 있는 자유당 창당 시기에 신당 창당의 주도 세력이 대중단체였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 단체들은 자유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대중 단체가 처음부터 권력에 예속되어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부인회가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독점적 권력 획득에 동원 조직이자 보조 기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 대한 직무적 책임만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구성요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승만 정권

의 자유당 입당 지시에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권의 압력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축첩반대와 간통쌍벌죄 제정 요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선택한 방향으로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의 요구를 지시하고 실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였다.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반관반민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퇴축되고 말았지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능동적 주체로 나서려는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대한부인회가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초반 이승만이 공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이 정권 초기 권력 기반을 대중단체에 두었으면서도 꾸준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대중 단체 내부의 파벌을 경계했다는 것은 대중단체에 대한 일률적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대한부인회가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사회의 악습을 철폐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1950년대 초기 한국 사회에 다원성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점차 그 효력을 발휘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원성은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국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갔다. 결국 대중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바로 4월 혁명이었다.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곧 여성 사회의 역동성을 대변하였으며, 이것은 4월 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로의 결성과 조직	4
1. 결성 과정과 간부 구성	4
2. 조직 체계와 재정	13
III. 대한부인회와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19
1. 자유당 창당과 대한부인회	19
2. 이승만 정권의 관제화 기도와 지도부의 저항	26
IV. 축첩 반대 운동과 간통쌍벌죄 제정	35
V. 맺음말	4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대한부인회 주요 간부의 활동 경력	8
<표2> 특별시와 각 도의 회비 분배비율	15
<표3> 자유당 초대 간부 명단	22

0

I. 머리말

대한부인회는 1950년대 우익 여성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대표적인 단체였다. 대한부인회는 1949년 2월 독립축성애국부인회와 서울시 부녀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정부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였다.

초기 대한부인회가 활동하던 시기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 한국 사회를 극도의 궁핍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며, 국가가 사회체제와 이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까지 통제하는 상황을 결정적으로 촉진시켰다. 한국전쟁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전쟁 경험은 단순히 ‘폐허’, ‘궁핍’, ‘억압’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¹⁾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더욱 우경 보수화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타자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국가 자체의 수호가 목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창출하기 위해 당시에 관변단체라 여겨졌던 대중단체들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모든 대중단체들이 처음부터 권력에 예속되어 활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부인회의 성격을 규정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부인회가 반관반민 단체로 결성되어 이승만 정권의 예속단체로 전락하였다고 서술한다. 그런데 대한부인회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관반민 단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부인회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50년대 대중단체

1)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8쪽.

에 관한 연구²⁾에서도 반관반민 단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예속단체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부인회가 예속단체로 전환된 시기에 대해서는 자유당 창당 시점,³⁾ 1953년 경 이승만이 자유당에 흡수될 것을 지시한 시점,⁴⁾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이승만 정권 말기⁵⁾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승만 정권과 대한부인회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다. 결성 초기 대한부인회의 활동 모습을 보면 대한부인회가 자유당 창당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1950년대 초반 대한부인회 회장이었던 박순천과 이승만은 갈등과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부인회 내부에 친이승만세력 뿐 아니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여성 지도자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 말기에 예속단체화 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대한부인회가 예속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결과만을 부각시킬 뿐 구체적으로 대한부인회 출범 초창기에 반관반민 단체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분석은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역동성있게 드러내기가 어렵다.

대한부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인 전재 구호사업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견해⁶⁾와 여성 문제를 입법화 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 주장⁷⁾이 있다.

2)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경인문화사, 2005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3) 김수자, 앞의 책.

4)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단체활동사』, 1996.

5) 김원홍·김혜영·김은경 공저, 『해방 후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신영숙, 「해방 이후 1950년대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여성연구논총』 제15권 1호,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 이효재·정충량,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논총』 1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원, 1969 ; 최은희, 『여성전진 70년』,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1.

6)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1.

대한부인회가 단순히 권력에 종속되어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한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부인회의 활동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회압력단체로서 여성의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킨 대한부인회의 저력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 문제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자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한부인회가 했던 여권신장 활동도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부인회의 결성 배경과 조직 과정, 그 체제와 인적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초기 대한부인회의 성격을 정치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특히 자유당 창당 시점에서 부인회와 자유당이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승만 정권의 관제화 시도와 이로 말미암은 대한부인회 간부들과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인회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본래의 창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1950년대 대한부인회의 조직과 구성원 및 추진 사업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발간한 『한국여성운동약사』와 정무장관(제2)실에서 발간한 『한국여성단체활동사』 등의 단체사 자료 및 여성 지도자들의 회고록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의 일간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대한민국사』 등 연대기 자료, 『국회속기록』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였다.

7) 윤정란, 「제2공화국의 여성정책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II.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로의 결성과 조직

1. 결성 과정과 간부 구성

해방 직후 다양한 여성운동의 흐름은 38선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좌익 세력을 점차 배제해가는 가운데 우익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통합되어갔다. 우익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에는 미군정 시기 여성정책 담당 기구였던 부녀국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녀국은 모든 여성단체들이 부녀국에 등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선언⁹⁾하였다. 즉 미군정은 여성단체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관에서 조직하고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⁰⁾

우익 정치 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전후하여 반탁 명분을 내세워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부인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독립축성애국부인

8) 1946년 9월 14일 미군정 법령 제107호 부녀국 설치령에 의하여 보건후생부 내에 설치된 부녀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담당 행정조직이다. 부녀국 설치령은 부녀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선부인의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 개선에 관하여 군정장관에게 진언함.

둘째, 조선부인의 지위 및 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조사연구의 결과를 발표함.

셋째, 조선부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기관에 구신(具申)하여 그 표준과 방침을 제정함.

이후 보건후생부의 명칭은 사회부나 보건사회부로, 또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긴 하였으나 그 직제상의 연속성은 유지되었으며, 부녀국과 각 지방의 부녀과는 여성 관련 행정의 중심적인 기구였다.(황정미, 앞의 논문, 37~38쪽)

9) “과거에 부인들이 애국반을 조직하여 왔습니다. 또 교회에는 교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과학관계단체라든가 고학생 구호단체라든가 각 학교의 동창회, 자모회, 모자회 등은 모두 속히 부녀국에 등록을 하여 주셨으면 우리들은 관청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뒤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제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 등록을 하여 주십시오.”(「경북부녀과 설치에 대하여」, 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녀국, 『새살림』 제1권 제2호, 1947, 54쪽)

10) 여성단체와 당국의 밀착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48년 정부 시정방침 보고에서 전진한 초대 사회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관민합작의 부녀운동단체를 결성(부인구락부, 모자회, 애국부인회 등)하여 부녀에 대한 종합적 교화육성에 전력케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성단체의 결성도 사회부 업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민합작으로 여성 단체를 결성하는 이유가 부녀계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시정일보』 창간호, 1949년 1월 5일, 29~45쪽(정현주, 앞의 책, 122쪽, 재인용)]

회(이하 독촉부인회)도 미군정의 협조와 우익 세력 결집이라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유각경의 한국애국부인회와 독촉중앙부인단이 통합하여 1946년 4월 5일 발족되었다. 독촉부인회의 활동은 주로 반탁운동 관련 성명서 발표, 반탁 강연회 개최, 시위 주도 등 반탁 정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여성 단체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에 따라 독촉부인회를 비롯한 우익 여성 단체의 지도자 19명이 1948년 5·10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이 표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남성들의 이해 부족과 당시 여성들의 높은 문맹률 및 계몽 부족 때문이었다. 낙선한 여성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층의 여성과 일반 여성과의 괴리 또한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하였다.¹¹⁾ 독촉부인회의 활동은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많아 여성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는 당연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견고한 대중적 지지 기반은 조직이나 단체가 특정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독촉부인회의 지지기반은 대한부인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단체의 자율성 또한 존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독촉부인회의 성격은 대한부인회를 조직한 여성 지도자들이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익 여성 단체의 통합은 여성 계몽 활동과 대중적 기반 확보를 위해 중요했다. 그리하여 1949년 2월 독립촉성애국부인회

11) 양동숙,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419~420쪽.

와 서울시 부녀과장 김성실이 조직했던 서울시 부녀회가 통합하여 대한부인회가 발족하였다.

대한부인회는 단기간 내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먼저 박순천은 김활란·유각경·황신덕 등과 협의하여 여성운동의 기틀을 잡는데 도움을 받고자 박승호를 부녀국 국장으로 전진한 사회부장관에게 추천하였다.¹²⁾ 박순천과 박승호는 대한부인회를 시·군·읍·면까지 조직하기 위해 1949년 초 이범석 국무총리와 이윤영 사회부장관을 면담하여 여성 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무렵에 “여성의 대소 단체는 전부 대한부인회에 합류하라.”는 유시를 발표하여 대한부인회 조직을 지원하였다.¹³⁾ 이에행 부녀국 보호과장은 이윤영 사회부장관의 명의로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대한부인회를 조직하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였다. 그는 공문을 보내면서 독촉부인회 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적인 운영 및 조직 요강을 만들어 송부하였다.¹⁴⁾ 대한부인회가 미군정 시기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우익 산하 여성 단체였던 독촉부인회를 조직의 모체로 삼았다는 점은 대한부인회가 반관반민 단체로서 출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부인회는 1949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3개의 강령을 채택하였다.¹⁵⁾

1.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나라 위해 바치자.
2. 우리는 상애·상조하여 국민문화를 세우자.
3.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자.¹⁶⁾

12)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72~73쪽.

13) 최은희, 앞의 책, 304쪽.

14)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66쪽.

15) 『동아일보』, 1949년 2월 25일.

16)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74쪽.

이 강령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한부인회는 기본적으로 활동의 초점을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자립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에 두고 있었다. 해방 직후 여성운동에서 여성 문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경시되고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한부인회는 1949년 4월말까지 전국 시·도 본부 및 군 지부, 읍·면·동 지회까지 조직을 완료하였다. 5월 11일에는 숙명여중 강당에서 제1회 전국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 이윤영 사회부장관, 임영신 상공부장관 및 각 군·면 대표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¹⁷⁾ 대한부인회 총본부에는 총무·재정·조직·사업·외교부 등 5개 부서를 두었다.¹⁸⁾ 사업 목표는 첫째,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둘째, 군경 원호와 여성 계몽, 불우여성을 구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였다.¹⁹⁾ 총재에 프란체스카 여사, 회장에 박순천, 부회장에 박승호와 유각경을 각각 선출하였는데, 프란체스카가 총재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당시 다른 우익 단체들의 총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주목할 만하다. 주요 간부에는 황신덕·김철안·황애덕·최은희·임영신·박현숙·김성실·이예행·박인순·양배상 등 여성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었다.²⁰⁾ 대한부인회 주요 간부들의 활동 경력은 <표1> 과 같다.

17) 『동아일보』, 1949년 5월 13일.

18)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25쪽, 74쪽. 현재 대한부인회의 구체적인 조직체거나 간부 구성, 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최은희는 “대한부인회는 총본부나 시본부나 관계 서류를 남긴 것이 없어 존립 14년간의 굴곡을 더듬어 알 길이 없다.”고 하였으며(최은희, 앞의 책, 305쪽), 『부산여성백서』에서는 “대한부인회 지회의 활동도 있었을 것이나 대한부인회가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해체되었고 1963년 한국부인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이전의 활동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부산광역시, 『부산여성백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1999, 72쪽)

19)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75쪽.

20) 위의 책, 25쪽, 74쪽.

<표 1> 대한부인회 주요 간부의 활동 경력

이름 (출생년도)	학력	활동경력	기타활동
박순천 (1898)	부산신일여학교 졸(1917), 일본여 자대학사회학부 졸 (1917)	독립촉성애국부인 회 부회장(1946), 대한부인회총본부 회장(1949~1954)	조선공예주식회사금강정기공 장여공감(1939), 중앙여중부 교장(1940), 초대감찰위원 (1948~1950), 부인신문사사장 (1948), 국민회중앙총본부 부 위원장(1949), 제2대국회의원 (1950, 대한부인회 소속), 민주 당최고위원(1956), 제4대 및 5 대국회의원(1958, 1960, 민주 당소속), 민주당총재(1963)
박승호 (1897)	동경진전여자대학 졸	독립촉성애국부인 회 회장(1946), 대 한부인회총본부 부 회장(1949)	사회부 부녀국장(1949), 창덕공 립여자중학교 교장(1950), 한국 전쟁시 납치 사망
유각경 (1892)	정신여중 졸(1910), 중화민국북경협화 여전 졸	대한부인회총본부 부회장(1949), 대한 부인회총본부 부 회장(1952), 대한부 인회총본부 최고 위원(1953~1960)	조선애국부인회재건회장 (1945), 서울YWCA회장(1948), 사회부 부녀국장(1950), 자유당 중앙위원(1953), 자유당 중앙당 무임소부장(1956), 정부통령선 거대책위원회위원장(1957)
황신덕 (1898)	해주의정여학교 졸 (1917), 경성여자고 등보통 졸(1919), 일본 동경여자대학 교 사회사업학부3 년 수료(1925)	대한부인회총본부 정치부장(1949)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창립 중 앙위원(1946), 전국여성단체총 협의회위원장(1946), 재단법인 추계학교 설립 이사장(1951), 여성문제연구회 창설 회장 (1953), 가정법률상담소 창립 이사장 취임(1956)
김철안 (1912)	영덕공립소학교고 등과, 일본명치대 학 정치학과 교외 생 수료(1939)	대한부인회총본 최 고 위 원 (1953~1959)	원내자유당부녀부장(1951), 자 유당중앙위원(1953), 제3대 및 4대 국회의원(1954, 1958, 자유 당소속)

황애덕 (1892)	평양정진여학교, 이화여중, 이화여 대, 미국컬럼비아 대학교육과	대한부인회총본부 창설위원(1949)	평양승의여자중학교 교원 (1911), 전국여성단체총연합회 회장 (1946), 자유당중앙위원 (1953)
최은희 (1917)	해주정의여학교 졸 (1917), 경성여자고 등보통학교 졸 (1919), 동경일진영 어학교 졸(1922), 동경여자대학교 사 회사업학과 3년 수 료(1925)	대한부인회 서울시 본부 부회장(1949)	조선일보 기자 8년(1925), 여권 실천운동자클럽대표(1945), 서 울시보건부인회 창설 회장 (1946), 대한여자국민당 서울시 당수(1952), 여성단체총협의회 문화부장(1953), 대한국방부녀 회 창설위원 및 문화부장 (1953), 대한여자국민당 중앙당 문화부장 9년(1954)
임영신 (1898)	전주기전고등여학 교 졸(1928), 켈리 포니아대학 대학원 졸(1930)	대한부인회총본부 창설위원(1949), 대 한부인회총본부 중 양상임위원(1951), 대한부인회총본부 최고위원(1959)	여자국민당 당수(1945), 초대 상공부장관(1948~1949), 초대 국회의원(안동보궐선거, 1949, 대한여자국민당소속), 2대 국 회의원(1950, 대한여자국민당 소속), 중앙대학교 총장(1953), 대한국방부녀회총본부회장 (1953), 전국여성단체연합회장 (1957)
박현숙 (1896)	승의여학교 졸	대한부인회총본부 창설위원(1949), 대 한부인회 총본부 최고위원(1953)	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6), 중 양선거위원회위원(1947), 대한 민국정부감찰위원(1948), 무임 소장관(1952), 자유당사회부장 (1957), 제4대 국회의원(1958, 자유당소속)
김성실 (1899)	이화고녀, 이화여 대, 미국매사츠세 츠마운트홀록여자 대학	대한부인회 총본부 이사(1949)	이화여중 교원(1930), 서울시 내무국 부녀과장(1947~1949)
이예행 (1906)	정신여학교 수학, 일본 내량여자고등	대한부인회총본부 이사(1949~1952),	사회부 부녀국 보호과장 (1948~1949), 사회부 부녀국장

	사범학교 졸(1927)	대한부인회총본부 최 고 위 원 (1952~1954)	(1952~1955), 덕성여대 강사 (1956), 숙명여중고 전임강사 (1958~1960), 보건사회부 부녀 국장(1960~1961)
박인순 (1909)	개성호수돈고등여 학교, 이화여대 가 사과	대한부인회총본부 총무부장(1949), 대 한부인회 서울시본 부 회장(1955)	원산보혜여자관 교원(1933), 평 북송덕여자학교 교원(1934), 대한 적십자사창립위원(1947), 서울 시 사회국 부녀과장(1949), 대 한 적 십 자 사 중 앙 집 행 위 원 (1950), 대한적십자사 비서장 (1954), 보건사회부 부녀국장 (1958)
양배상 (1905)	수원양잠전수학교	대한부인회 성환면 지부장(1948), 대한 부인회총본부 근로 부장(1948), 대한부 인회 중구지부 이 사 겸 저동분회장 (1949), 대한부인회 서울시본부 이사 (1953), 대한부인회 총본부 중앙상임위 원(1956), 대한부인 회 총본부 선전부 장(1959)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총본부 근로부장(1946), 대한청년단 성 환면단부 명예단장(1948), 전재 부인상조회 이사 겸 업무부장 (1951), 대한여자국민당 중앙위 원(1952), 대한여자국민당 서울 시당부 부당수(1953), 대한국방 부녀회 선전정보국장(1953), 북 진통일여성투쟁위원회 서울시 부회장(1953), 이대통령 의의장 전국애국단체연합회 선거추진 위원회(1956), 전국여성단체연 합회 재무부장(1957)
박마리아 (1906)	개성호수돈여자고 등보통학교 졸 (1923), 이화여전 졸(1928), 미국 마 운티홀리대학 및 스카릿대학에서 수 학	대한부인회 서울시 본부 부회장(1949), 대한부인회 총본부 최고위원(1954), 대 한부인회 총본부 회장(1956~1960)	이화여대 교수(1945), 대한 YWCA 문화부장(1948), 대한 YWCA 회장 취임(1952), 이화 여대 부총장(1954)
박봉애 (1908)	배화여자고등학교 졸(1925), 중앙보육	대한부인회총본부 이사 및 총무	이화여전 교수(1937~1941), 독 립촉성애국부인회 본부 총무

	학교 졸업(1928), 일본여자체육전문학교 본과 졸업(1932)	(1949~1954)	(1946~1947), 자유당 비주청 조직정비위원회(1953), 민주당 중앙당 부녀지도부장(1956~1959)
--	-------------------------------------	-------------	---

(출처 : 김석영, 『여류명사 30인선집-인물평판기』, 송문사, 1953 ; 한철영, 『한국의 인물 : 제1선 50인선』, 문화춘추사, 1954 ; 김숙자, 『한국여성명사집』, 입체문화사, 1960 ;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 한밤의 소리사, 1986 ; 현대한국인물평론사 편저, 『현대한국여성사』, 현대한국인물평론사, 1990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 양동숙,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대한부인회를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들의 특성은 첫째, 대부분 고학력자였다. 이들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그리고 대부분 교사나 교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발전된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보고 배우며 단체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둘째, 여성 지도자들은 2개 이상의 여성 단체에 참여하였다. 임영신은 자신이 조직한 대한여자국민당과 국방부녀회에 각각 당수와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박마리아는 대한부인회와 YWCA의 회장으로, 최은희는 여성단체총협의회와 국방부녀회, 대한여자국민당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여러 단체에 가입·참여하며 조직적·대중적 기반을 발판삼아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셋째,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녀국의 공무원으로서 부인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부인회 창설 무렵, 박승호는 총본부 부회장과 사회부 부녀국 국장을, 서울시 내무국 부녀과장이었던 김성실은 총본부 이사를, 김성실의 후임인 서울시 사회국 부녀과장 박인순은 총본부 총무부장을 겸하였다.²¹⁾ 단체

와 행정 당국의 밀착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충청북도 부녀계장 조운순은 충북 도본부 부회장을, 전라남도 부녀계장 조아라는 전남 도본부 간사를 겸하였다.²²⁾

넷째, 특기할만한 점으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모두 친여당 세력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박순천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부산정치파동 등으로 친이승만계에서 친야당계로 돌아서는 대표적 인물로, 2대 국회시절 내내 무소속이었다가 후에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박봉애는 자유당 비촉청과 조직정비위원회 소속이었으나,²³⁾ 전국대회를 앞둔 1954년 부인회를 탈퇴하였고, 후에 민주당에 입당하여 중앙당 부녀지도부장을 지냈다. 최은희는 대한여자국민당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자유당의 예측단체로 전락되어가는 부인회를 비판하는 기고를 신문에 실기도 하였다.²⁴⁾ 이예행은 사회부 부녀국 보호과장과 국장을 거치며 행정담당자로서 부인회와 당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친이승만 성향은 아니었다. 이예행이 부녀국 국장으로 있던 1955년 1월,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따르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심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여성 행정 담당기구였던 부녀국의 축소 논의가 나왔다.²⁵⁾ 결국 8월에 부녀국 국장은 김순화로 바뀌었고, 이예행은 4월혁명 직후 1960년 5월 19일이 되어서야 다시 보건사회부 부녀국 국장으로 취임하였다.²⁶⁾ 따라서 그

21) 서울시 부녀과는 1947년 6월 미군정 내무국 내에 창설되어 1948년 8월 9일 서울특별시훈령 제20호 서울시 직능분장규정(職能分掌規程)으로 후생국 내 부녀과로 편성되었다.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2호로 내무국으로 이관, 서울특별시 기구로 제정되었다가 다음해인 8월 15일, 지방자치법시행법률제32호 제1차 기구개편으로 사회국 소관으로 되었다.(보건사회부, 『부녀행정40년사』, 1987, 255쪽)

22) 『동광신문』, 1949년 5월 1일(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1, 1999, 685쪽).

23) 『민주신보』, 1953년 3월 31일(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 2008, 596~598쪽).

24) 최은희, 「부인회 시평 - 부인회 총회에 즈음하여」 1~3, 『조선일보』, 1956년 9월 26일~28일.

25) 부녀국의 축소 논의가 나오자 1955년 1월 10일 아침 10시경 대한부인회 회원 약 50~60명은 “부녀행정의 기구를 강화하라!”, “중대시하라 여성문제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조선일보』, 1955년 1월 11일)

26) 보건사회부, 앞의 책, 242쪽.

는 친이승만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부인회 내부에는 물론 친자유당 인사들도 있었다. 유각경, 김철안, 황애덕은 1953년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철안은 원내 자유당 초대 간부로서 부녀부장을 지냈고, 50년대 후반에는 자유당의 주류파²⁷⁾로 3대·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이었던 유각경은 4월 혁명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전(前) 국무위원 및 자유당 기획위원 등 23명이 구속될 때 함께 구속되었다. 박마리아는 서울시 본부 창립 때 부회장을 하였지만, 정부 환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부인회를 자유당의 정치도구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이와 같이 초기 대한부인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친이승만, 친자유당, 중립적 또는 무정치적 성향 등으로 다양하였다.

반관반민 단체로 출범한 대한부인회는 정부의 지원으로 활동 초기에는 새 국가 건설에 여성참여를 촉진하고자 국민생활개선사업, 문맹퇴치, 사상 및 예의범절 교육 등 주로 여성들을 계몽하는 사업에 치중하였다. 전쟁을 거치면서 출정장병 환송, 육군병원 전상자 위문, 장병 군복 세탁, 군경미망인 생계보조, 군경이재민의 직장알선과 신상 상담 등 전재민 구호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인회 고유의 독자적 활동을 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다.

2. 조직 체계와 재정

대한부인회는 1949년 2월 출범이후 그 해 4월말까지 각 지방 조직의 결성을 완료하였다. 독촉부인회의 경우 도 지부 이하 시, 군 지부로의 조직 확대

27) 오제연, 「1956-1960년 자유당 과두체제 형성과 운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1쪽.

는 단체 결성 1년여 후인 1947년 후반 남한만의 총선거가 예상되는 때를 전후해서야 이루어졌다.²⁸⁾ 반면 대한부인회는 전국적 조직 결성이 단체 설립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독촉부인회가 조직 결성 후에도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미약하게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부인회는 단체 성립 초기부터 전국적 조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하여 확장된 조직 체계는 도 본부를 비롯하여 시·군 지부, 읍·면·동 분회까지 전국적으로 편성되었다.

대한부인회 서울시 본부는 1948년 4월 30일 서울시 사회의실에서 발족하였다.²⁹⁾ 박순천·유각경·김성실·박승호·박마리아·최은희·한소제·조어인·이옥성·김분옥 등의 창설위원이 참석하였고, 회장에 한소제, 부회장에 최은희와 박마리아를 선출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8개의 본부는 1949년 3월과 4월 사이에 독촉부인회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고혜영을 중심으로 한 부녀그룹 회원들이 그대로 대한부인회에 흡수되어 제주도본부를 창설하였다.

단체 활동에서 재정은 단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사업을 계획·시행하는데 필수적 요인이다. 대한부인회가 정부의 도움으로 전국적 조직화가 되었듯이 재정 지원 또한 정부로부터 받았다. 재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회비³⁰⁾ 이외에도 정부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28) 양동숙, 앞의 논문, 396쪽.

29) 독촉부인회와 서울시 부녀회의 대한부인회로의 통합은 1948년 2월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 시점은 5·10총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으므로 전국적인 조직 확장은 하지 못한 채, 여성 지도자들은 바로 선거 준비에 돌입하였다. 박순천 또한 1948년 2월 두 단체를 통합하여 서울에 가칭 대한부인회를 발족시켰다고 하였다.(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71쪽)

30) 초기 대한부인회의 회비 내역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1958년에 창간된 『대한부인회보』의 정관을 살펴보면, 통상 회원은 매년 회비 1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별로 나누어 배분하고, 그 중에서도 지부조직의 규모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배분하였는데, 총본부에는 가장 낮은 비율을 배당하였다.

로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정부는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 등 사회단체 유지비 명목으로 각 세대에 연 400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국민회 200원, 대한청년단 100원, 대한부인회 100원씩 분배하였다. 각 단체는 이것을 중앙본부에 1할, 시·군지부에 2할, 읍·면(각 동·리 포함) 지부에 6할씩 배당하였다.³¹⁾ 대한부인회는 전쟁 중에 출정장병 환송, 육군병원 전상자 위문, 장병 군복 세탁, 군경미망인 생계보조, 직장알선 등의 원호 사업을 위해 가구당 100원씩 회비를 징수할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결국 6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³²⁾

이 시기 기부금은 점차로 하나의 반(半)공식적인 세금으로 발전하여³³⁾ 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 제헌국회 의원은 “현 민중의 중요한 일은 첫째 기부, 둘째 공출, 셋째 고문올시다.”라고 토로했는데, 농민들은 수십 종의 기부금에 견딜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나열한 각종 세금 품목을 보면, 대한부인회비, 대한청년단비, 대한청년단작업비, 민보단비, 지서수리비, 지서방야비(防夜費), 비상경비, 비상사태대책위원회 비상대책비, 국방협회비, 소방협회비, 사회교육협회비, 가축보건비, 축우공제특별가축비, 농회비, 후생협회비, 수구비(水救費), 순사가 사망할 경우 경비 등으로

<표2> 특별시와 각 도의 회비 분배비율

서울특별시	각 도
동분회 5할	읍·면지부 5할
구지부 2할	군지부 3할
시본부 2할	도본부 1할
총본부 1할	총본부 1할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보』 창간호, 1958년 7월 20일, 28쪽 (정현주, 앞의 책, 133쪽, 재인용)]

31) 『자유민보』, 1949년 12월 28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 2001, 713쪽). 단, 1950년 1월 15일자 『동방신문』에는 중앙본부에 1할, 도지부에 1할, 시·군지부에 1할, 읍·면지부(동리 포함)에 6할 분배로 기록되어 있다. [『동방신문』, 1950년 1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책 16, 2001, 69쪽)]

32)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50쪽.

33) RG319(Army Staff), Civil Affairs/Military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e Decimal File, 1952-54, Hqs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 APO 59, 『The National Society, 1945-1953』, 8쪽(김수자, 앞의 책, 103쪽, 재인용).

이러한 기부금 징수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기부금을 횡령해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식사에 낭비하고는 또다시 징수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⁴⁾

급기야 1951년 8월 20일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안’을 제출하였다.³⁵⁾ 8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중 정당을 제외한 기타 단체에 대하여 자칫 소속원의 부담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원 1인당 연액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³⁶⁾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 등 단체 규약에서는 모든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기부금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³⁷⁾

동회(洞會)를 통한 물품 강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1950년 1월 13일자 『자유민보』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각 동회에서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응하지 말고, 지사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면 동회를 통해 물건을 팔 수 없으며, 국민회·한청·대한부인회 등의 단체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다.³⁸⁾ 이것으로 보아 대중 단체에 한해서는 동회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판매 수익을 단체 운영비의 일환으로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서중석, 앞의 책, 2007, 84쪽.

35) 기부금이란 “법인·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의 가입금, 일시금 또는 회비의 경우와 종교 단체에서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뢰, 권위 등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국회사무처, 『국회사』 1, 국회사무처 위원국자료편찬과, 1971, 550쪽)

36) 국회사무처, 위의 책, 550쪽.

37) “현재 단체로는 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대한국민회가 있고 경찰협조단체인 향토방위대는 해산되었으나 그 후 다시 생긴 민방공지부·의용소방대·동 방호단·청소봉사대의 7개 단체가 있어 영등포구만 해도 완장대·신분증명서·사진대 등을 합하여 수백만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내용인 즉 남자 적은 이곳인지라 한 사람이 몇 가지 단체에 가입되어야 하고, 동 회장은 동 회장직까지 합하여 여덟 가지 단체 책임을 맡고 있는바 이것은 비단 명수대만이 아니라 서울 각 동리의 실정이라고 단체 합동을 주장하며 견디어 낼 수 없다고 비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1951년 10월 21일)

38) 『자유민보』, 1950년 1월 13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 2001, 79쪽).

물품 강매와 잡다한 부과금 문제는 1952년까지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경원호관계 모금을 위시하여 부녀단체인 대한부인회, 그밖에 단체에서 무려 십 수개 항목에 달하는 모금 또는 물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동민에게 부과시키고 있다.”고 하여 부인회의 물품 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부과금의 경우 각 동회를 통해 부과시킬 수 있는 항목은 동회비, 청소비, 소방사업비, 고적비 등 매 세대 1,000원이었다. 반면에 대한부인회에서는 부녀회비 명목으로 매 세대 2,000원씩 동회를 통해 징수하여 물의를 빚었다.³⁹⁾

대한부인회가 정부의 행정 지원 및 기부금, 회비 등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중앙본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지원비는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본부 중구지부장이었던 한길(韓吉)은 부인회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구청에서는 겨우 땀감을 구입해다 우유죽을 끓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에 풀칠을 해주는데 연료비 지급에 지나지 않았다. 관(官)의 혜택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는 한국 전력회사에서 내주는 전차승차권이었는데 그것도 겨우 회장·부회장에게만 주어졌다.”⁴⁰⁾고 하였다. 반면에 대한청년단의 경우 국가보조금, 후원회 조직, 청소업 대행, 국가 건설 사업 참여 등으로 재정을 비교적 공식적 경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⁴¹⁾

여성의 경제력이 미약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이 부족했던 부인회 회원들은 자비를 내어 충당하거나 필요한 물품이나 식품 등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여성단체의 재

39) 『평화신문』, 1952년 12월 18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 2008, 561~562쪽).

40)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47쪽.

41) 하유식, 「이승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 -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3호, 부경 역사연구소, 1997, 216쪽.

정기반이 취약한 원인으로서는 공식적인 취업기회 및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과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후원기관 및 정치력 부재에 의한 정책적 지원 부족,⁴²⁾ 남성들의 여성 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었다.

반관반민 단체로의 출범은 국가 권력의 일정한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부인회의 지도자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정력을 이용한 것은 원활한 지원을 통해 단체를 활성화 시켜보려는 의도에서였다. 해방 이후 여성운동은 국가 수립을 위한 운동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를 수립한 이후 여성 지도자들은 서서히 여성들의 이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나 운동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대중의 지지와 이해도 필수 요소였겠지만, 재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여성들만의 힘으로 당시의 여성운동은 큰 과업이었을 것이다. 부녀국 보호과장이었던 이예행 역시 당시의 여성운동은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들까지도 사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 여건이나 자금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관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⁴³⁾ 따라서 정부에 의한 ‘원활한 지원’이라는 현실 논리는 당시 여성 단체가 반관반민 단체로의 출범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42) 박은숙, 「여성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활동」, 경북대학교 도시행정 박사학위논문, 1999, 25~26쪽.

43)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65쪽.

III. 대한부인회와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1. 자유당 창당과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반관반민단체로서 출발하였다. 당시 사람들 역시 이 단체가 독립축성애국부인회를 조직의 근간으로 하여 출발하자 순수한 여성단체가 아닌 반관반민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⁴⁴⁾ 대한부인회에 몸담고 있던 간부들도 자신들의 조직이 반관반민 단체로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이란 사전적 의미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대어 단체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로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반관반민 단체로 조직된 우익 단체들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단체의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나름대로 독자성을 견지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후반으로 갈수록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1950년대 반관반민 단체들의 주된 활동은 국민대회를 통해 이승만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에게 동원은 국민적 통합과 자신의 권력 장악 및 정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대한부인회는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국애국단체연합회⁴⁵⁾ 또는 국민회 주최 국민대회 등에 동원되었다. 특히 이승만은 국회와의

44)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66쪽.

45) 1946년 5월 14일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진영의 각 정당 및 단체가 모여 조직된 단체로 애련(愛聯)의 구성을 추진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전개, 공산주의 단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타도, 민주우방과의 친선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연대하였으나, 후에 이승만 계열과 임시정부 계열로 분열되었다. 이승만 정권기에도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대한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노총·대한농총·대한부인회 등의 단체를 망라하였으며,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운동에 동원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표(<http://db.history.go.kr>)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996, 183쪽, 263쪽]

대립이 심화되던 시점인 1949년 말에서 1952년까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의(民意)라는 이름으로 대중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국민대회를 전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중 동원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과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가 총재와 고문으로 있었던 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등의 대중 단체였다.⁴⁶⁾

흔히 1950년대의 대중 단체들이 원외 자유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원외 자유당 창당의 주도 세력은 당시 5대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국민회(이하 국민회),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하 대한노총),⁴⁷⁾ 대한농민조합총연맹(이하 대한농총),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가 아닌 이범석의 족청계였다.

이승만은 1950년 5·3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회 간선으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정권 유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당 창당을 시사하였다. 그는 재선을 위해 이범석의 영향력과 민족청년단(이하 족청)⁴⁸⁾의 조직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1951년 8월 31일 주중 대사로 나가있던 이범석을 급히 불러들였다. 이범석은 원내와 원외에서 정책과 견해 차이로

46) 김수자, 앞의 책, 110~112쪽.

47) 자유당 결성과정에서 대한노총 간부들은 두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조방쟁의를 놓고 조방쟁의대책위원회와 대한노총정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대한노총 내의 주종필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총정화위원회 세력이 바로 원외 자유당의 추종세력이었다. 진진환을 중심으로 한 조방쟁의대책위원회 세력은 원내자유당에 뜻을 같이 하였다(서중석,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147쪽 ; 임송자, 앞의 책, 209쪽). 즉 대한노총은 자유당 결성을 놓고 분열되어 있었으며, 대한노총의 한 분파가 자유당 결성에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48) 민족청년단은 1946년 10월 이범석을 단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다른 우익 청년단체가 단기적인 반공 물리적 동원을 목표로 활동한 반면 족청은 친미 지배세력의 결집과 재생산 기반으로서의 의의를 지닌 청년단체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족청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단체가 서명 등록과 서명 날인식으로 단원을 모집하였던 반면 족청은 단원 자격 심사를 하여 고학력의 훈련원을 모집하였으며, 중앙훈련소와 지방훈련소를 들어 전문적 요원을 양성하였다. 단원이 1948년 6월 30일 현재 87만 3,310명이고 그해 가을에는 13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 훈련을 받은 단원을 가지고 있어 해산된 후에도 가장 강력한 우익단체였다.(서중석, 위의 책, 2005, 148쪽 ; 이진경, 「조선민족청년단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25~31쪽)

창당 작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보고 이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힘썼다. 그는 전국적인 족청의 잔류 조직을 동원하여 일거에 신당 조직을 원외 자유당 조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⁴⁹⁾

그러면 원외 자유당이 창당되던 시점에 초기 대한부인회가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 살펴보자. 이승만은 1951년 8월 5일 ‘신당 조직에 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각 민간 사회단체는 신당에 가입할 때 단체 명의로는 허용치 않고 오직 개인 자격의 가입만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정당으로 인해 단체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단체가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⁵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자유당의 기반으로 대중단체들을 자유당의 산하단체로서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당 조직에서의 대중단체 합동 과정은 어디까지나 소속 단체의 결의가 아닌 개인적 참여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1951년 8월 15일, 이승만은 “나라의 복리와 자기들의 공동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을 만들 시기가 왔다.”고 언명하였다. 정당 창당 시사에 따라 17일 부산시내 광복장에서 조경규·양우정·김정실·오위영·태완선·홍창섭·지연해·이재학·김용우 등 아홉명의 의원과 국민회의 이활, 대한국민당 이윤선, 한청의 유화청, 대한농총의 채규항 외 1인, 대한노총의 조용기 외 1인, 제헌동지회 정현모 등 각 단체의 연락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당 조직을 위한 1차 준비회합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외 단체 중에서도 대한부인회는 이승만의 합동 권유에 전혀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49) 이진경, 위의 논문, 42쪽. 특히 이범석은 “강연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여 1주일 동안에 1만 6천킬로를 달렸고 하루에 강연을 평균 세 번을 하는 강행군을 거쳐 자유당 창당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이범석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회망출판사, 1966, 95쪽)

50) “四. 각 민간 사사단체가 본 정당에 가입코자 할때는 단체 명의로는 허락치 않고 오직 개인 자격의 가입을 허락할 것이니 절대로 혼잡치 말고 이 정당으로 인연해서 다른 단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각 단체에 인연해서 이 정당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신당조직에 관하여」, 1951년 8월 5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1956, 61~62쪽).

다. 한청에서도 일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였다.⁵¹⁾ 또한 신당 조직 준비회합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이 소속단체의 결의에 의해 나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⁵²⁾ 같은 해 9월 3일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도 소속 단체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활·주종필·채규항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참여하였다.⁵³⁾

부인회를 비롯한 대중 단체가 자유당 창당의 주도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은 자유당 초대 간부 진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3> 자유당 초대 간부 명단⁵⁴⁾ (*은 족칭계)

당 수 이 승 단	부 당 수 이 범 석*
당무국장 정 현 모*	부 국 장 홍 범 회*
사회국장 이 활	부 국 장 조 용 기
정무국장 양 우 정*	부 국 장 문 봉 제
제 1부장 김 인 선	제 2부장 김 철*
총무부장 유 화 청	재무부장 안 준 상*
선전부장 진 승 국	조직부장 원 상 남*
문화부장 박 순 석	조사부장 김 영 기*
의사부장 김 철 수	통계부장 황 호 현*
농민부장 최 상 석	부녀부장 조 현 경
노동부장 최 용 수	외무부장 강 석 천
감찰위원회 위원장 안호상*	

출처 : 강진화 편, 『대한민국건국10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51) “그런데 현재 원내 기성단체로서 금반 신당 공작에 전연 호응의 기세를 보이지 않는 단체는 대한부인회이며 그밖에 한청에서도 일부는 그 정도에 있어 그 태도에 있어 석연치 못한 측도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부산일보, 1951년 8월 26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 2006, 517~518쪽)]

52) 서중석, 앞의 책, 2005, 145쪽.

53) 한정일, 「야당으로서의 정비, 민국당」, 『한국의 정당』, 한국일보사, 1987, 231쪽(연정은, 「제2대 국회 내 공화구락부-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52쪽, 재인용).

54) 1951년 12월 자유당 결당대회를 한 후 1953년 3월 전당대회를 가질 때까지 당헌에 의한 정규편제를 보류하고 임시소위원회제로 당무를 집행하였는데, 이 초대임원의 편제는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편제한 것이었다.(서중석, 앞의 책, 2005, 148쪽)

199쪽 ; 이진경, 「조선민족청년단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안상정, 「민족청년단의 조직과정과 활동」,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참고.

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한부인회의 간부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상급 간부의 경우 국민회는 이활 한 명 뿐이고 부당수와 당무부국장, 정무국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간부직은 모두 족청계에서 차지하였다.⁵⁵⁾

이와 같이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은 자유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승만은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대중 단체들을 압박하지 않았다. 창당에 참여한 이들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그것이 자유당을 조직하는 데 미친 영향은 단체의 성격이 고려된 속에서 각 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위치나 분파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⁵⁶⁾

한편 1952년 초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 및 국회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 개헌안은 재적 175명 중 참석 163명, 가 19표, 부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원외자유당과 한청으로 하여금 정부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⁵⁷⁾ 그에 따라 2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 소환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는 대한부인회,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대한여자청년단 등이 합동으로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을 거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며 열린 것이었다.

1952년 2월 19일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국회본회의가 열렸다. 국회 조사에서의 초점은 집회에 나온 시위대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지시에 의해 나온

55) 부인회의 경우, 김철안만이 원내 자유당 창당에 참여하여 부녀부장에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51년 12월 27일)

56) 서중석, 앞의 책, 2005, 147쪽.

57) 위의 책, 147쪽 ; 하유식, 앞의 논문, 228쪽.

것이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 날 시위에 참가했던 단체들은 모두 단체의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⁵⁸⁾ 그러나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 시키고자 대중단체를 동원하여 국민대회를 개최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뿐이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대한부인회의 박순천과 대한노총의 전진한이 이 시기에 이승만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2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대한부인회 총본부 대표 박순천 의원은 부인회가 계몽 단체이자 구호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신당 창당 때 개인적으로 참여하되, 단체 명의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애국단체연합회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총본부로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만 부산 지부나 경상도 본부로서는 모르겠다.”⁵⁹⁾고 여지를 남겨 총본부의 승인 없이 하부조직에서 대한부인회의 이름으로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창양민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반이승만 세력으로 돌아선 박순천이 총본부의 명의로 국회의원 소환 시위 참여를 승인했을 리 없다. 이는 대한부인회가 자유당의 예속 단체로서 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참가자들이 단순히 개인적 또는 지방 지부 차원에서 참여한 것임을 의미한다.

대한노총 전진한은 이승만 노선에 배치되는 면모를 보여 왔다. 1950년 2월 국회 내 반이승만세력에 의해 추진된 내각책임제 개헌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유당 조직 과정에 참여했던 대한노총정화위원회와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원내 자유당 창당에 가담하고 있었다.⁶⁰⁾ 그러한 전진한이 이

58) 2월 18일 시위에서 각 대중단체 대표들 중 유희청만이 시위에 참여하였다.(「제2대 12회 19차 국회속기록」, 1952년 2월 20일)

59) 「제2대 12회 18차 국회속기록」, 1952년 2월 19일 ; 『서울신문』, 1952년 2월 21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권, 2007, 473쪽).

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지지하기 위해 총본부의 이름으로 시위 참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조사에 응했을 때 진한은 시위 참가를 결의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참가를 했어도 개인 자격으로 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일련의 사건들은 초기 대한부인회가 이승만 정권에 완전히 예속된 단체가 아니었으며,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는 반관반민 단체로서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관제단체는 정부 기관에 종속되어 권력의 이익 추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없어 이익집단으로서의 정당한 이익 표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관제단체의 이러한 특징은 이승만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관반민 단체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운영의 자율성은 부족하였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의사 발언권이 있어 분출되는 정치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대한부인회는 이러한 반관반민 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다른 대중단체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조직의 개편이나 발전에 대해 담화를 통해 영향을 가하였다. 그러나 대한부인회의 경우, 임원 선거나 조직의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1953년 이후의 일로, 이승만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면서부터였다. 대한부인회는 여성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단체에 비해 정치적 개입이 덜하였다. 이러한 측면 역시 대한부인회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한 채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60) 임송자, 「1950년대 노동조직과 이승만·자유당권력과의 관계」,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30호, 2008, 160쪽.

2. 이승만정권의 관제화 기도와 지도부의 저항

대한부인회 회장 박순천은 해방 후부터 이승만을 지지해왔다. 그는 해방 직후에는 독촉부인회 부회장을 맡았고, 정부 수립이후에는 초대 감찰위원과 국민회 중앙총본부 부위원장을 맡는 등 친이승만 세력이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실정(失政)으로 박순천은 반이승만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1950년 6월 19일 2대 국회가 개원하고 박순천은 김광준·곽상훈·윤길중·오위영·엄상섭·김철성·김동성·김종렬 등과 함께 무소속구락부를 구성하였다. 무소속구락부는 전쟁 전까지 5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민국당 50명, 국민당 43명, 국민구락부 35명, 민정동지회 22명을 앞서는 원내 제1세력이었으나, 전쟁 중에 27명의 의원이 납북되고, 3명이 피살, 5명이 사망하면서 전쟁 이후에는 그 자리를 신정동지회에 내주어야 했다.⁶¹⁾ 무소속구락부는 체제를 정비한 후 공화구락부로 새롭게 발족하였다.⁶²⁾ 이후 국민방위군 사건⁶³⁾으로

61) 1951년 2월 초 원내 분포는 국민구락부와 민정동지회가 결합한 신정동지회가 80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민국당이 30석, 공화구락부가 48석을 차지해 신정동지회·공화구락부·민국당 3세력이 확립되었던 상태였다. [마한, 『한국정치의 총비판』, 한국정치연구회, 1959, 87쪽(연정은, 앞의 논문, 9쪽, 재인용)]

62) 『동아일보』, 1950년 11월 23일.

공화구락부 의원들은 홍익표, 곽상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선의원이기에 일차적으로는 당시의 정치적 정세와 상황에 의해 이승만 세력에서 이탈된 경향이 강하였다. 이들은 5·30선거를 통해 기성정당의 무정견·무이념을 비판하면서 당선된 무소속의원들이었다. 이승만은 전쟁 초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했고, 자신의 정치권력 장악에만 몰두하였다. 연정은은 이승만이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보여준 실정(失政)이 더 이상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와 이승만을 믿을 수 없던 상황에까지 이르자 공화구락부가 반이승만세력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연정은, 앞의 논문, 16~17쪽)

63) 1950년 11월 이승만 정부는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소문에 따라 50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남쪽으로 후송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 같은 해 12월 16일 이 법안을 즉시 공포하여 발효시켰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구상해서 조직하였던 것으로 정규군에 비해 예산과 군수물자는 곧장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나마도 있던 예산액의 일부는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된 국민방위군 지도부가 횡령하여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관계(官界)에 자연스럽게 뇌물로 유포되었다. 이 때문에 국민방위군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참다못한 방위군들이 집단 탈출을 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공화구락부에 의하여 국민방위군 횡령자금이 국회 내 신정동지회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부터였다. 이 정치자금은 당시 국회내에서 자신의

수세에 몰려있던 신정동지회와 당 건설을 목적으로 한 공화구락부가 합동하여 1951년 5월 29일 공화민정회를 만들자, 박순천은 불만을 갖고 탈퇴하여 같은 해 6월 5일 구을회·김종렬·김택천·민영복·유덕천·윤길중·한필수 등과 함께 무소속으로 가입하였다.⁶⁴⁾

박순천이 반이승만 세력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부산정치파동이였다. 1952년 초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상하 양원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의를 발동하여 1952년 2월 18일 국회의원 소환 데모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급기야 5월 25일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26일에는 약 40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를 통제로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심지어 국제공산당 사건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정헌주·이석기·서범석·임흥순·곽상훈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7월 4일에는 발췌개헌안⁶⁵⁾을 기립 표결로 재석 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시켰다. 한국 전쟁 이후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 그리고 부산정치파동 등으로 이어지는 이승만 정권의 실책으로 크게 실망한 박순천은 류덕천, 김택천 등과 함께 기립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⁶⁶⁾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던 이승만이 신정동지회를 주축으로 자신의 당 건설을 하기 위한 사전 공작에 썼던 것이다.(연정은, 앞의 논문, 31~37쪽 ; 최정순, 「박순천 정치리더십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7쪽)

64) 연정은, 위의 논문, 11쪽, 45쪽. 국민방위군사건이 터지고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국회의원 관련여부 진상보고서에 관한 건’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박순천은 “불의를 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불의를 감추려고 불의를 조장시키는 사람과 불의를 보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쳤다.(「제2대 9회 3차 국회속기록」, 1950년 12월 13일)

65) 장택상의 신라회가 주동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내각제개헌안과 직선제개헌안을 절충하여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총리 제정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직, 그리고 국회의 불심입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서중석은 이 발췌개헌안은 사실상 미국의 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장면 국무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국무총리 서리였던 허정은 언커크(UNCURK)에서 그를 찾아와 정치파동 수습책으로 발췌개헌안을 냈고, 그것을 장택상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회고했다. 나중에 신익희·조봉암 등 국회의장단에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정치혼란이 더 이상 악화되면 안된다고 말했던 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것이다.(서중석, 앞의 책, 2007, 110~112쪽)

66) 최정순, 앞의 논문, 82쪽. 박순천은 개헌안 기립 투표 시 자신을 포함한 몇몇 의원은 기립하지 않고

이승만은 개헌이 마무리된 이후 자유당과 각 대중 단체를 보다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1952년 8월 5일 제2대 정·부통령선거 직후 자유당뿐만 아니라 정계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이범석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범석이 제2대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범석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이승만은 함태영을 지지하였으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택상과 내무부장관인 김태선을 통해 행정조직과 경찰에 대해 함태영의 선거운동을 종용하였다.⁶⁷⁾ 9월에 있었던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이승만이 총재직과 부총재직을 폐지하고 중앙위원부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과 11월 각 단체에 지시하여 대표자들을 자유당 중앙위원부로 보낼 것을 명한 것 또한 족청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1952년 10월 18일 피난지 부산에서 대한부인회 2대 회장을 뽑는 전국대회가 열렸다. 소속 간부들이 부산으로 집결하자 내무부에서는 회원들에게 형사를 붙여 자유당에 비협조적인 박순천 회장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경찰을 동원하여 각종 선거에 개입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부인회 임원 선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각 경찰국이나 경찰서에서는 ‘부인회 조직의 재편 강화’라는 표어를 내걸고 임원 선정에서의 간섭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⁶⁸⁾ 반이승만세력으로 돌아선 박순천의 행보

바로 의사당을 빠져나갔다고 증언하였다.(박순천, 「나의 이력서 31」, 『한국일보』, 1974년 12월 21일)

67) 박태균, 「1954년 제3대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17, 1995, 191쪽.

68) “10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국가 공무원법 제37조를 위반하여 경찰이 정당사회단체의 조직 역원선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각 경찰국이나 경찰서에 가본다면 2월 중 실천 목표로 당당히 표어를 내걸고 그 주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바 그 가운데는 민중조직 재편요강으로 1. 자유당 조직의 재편 강화, 2. 농민회 조직의 재편 강화, 3. 부인회 조직의 재편 강화 등등을 내걸고 각 면 부락에는 담당 형사를 지명 배치하여 촌락이나 면의 자유당 조직은 경찰관이 좌지우지하고 농민회의 역원을 경찰이 간섭 선정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직무로 알고 열심히 이를 강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다.” [『부산일보』, 1953년 4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 2008, 125~126쪽)]

를 보았을 때 이승만 정권에서 그를 가만둘 리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회장 후보로 박순천 외에도 유각경·황애덕·임영신·박현숙 등이 올라 있었으나, 박순천은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장에 재선되었고 부회장에 유각경·박현숙 등이 선출되었다.⁶⁹⁾ 이승만은 1952년 12월 9일 발표한 담화⁷⁰⁾에서 “저반 박순천 씨를 회장으로 임원 개선을 반대한 부인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회장 선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정부의 압력과 쟁쟁한 후보자들의 출마로 자칫 당선에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박순천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까지 그만큼 박순천의 지도력이 대한부인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을 반증한다. 또한 회원들도 그의 지도력에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52년 9월 자유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이승만은 당헌을 개정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등의 상위기구를 폐지하고 새롭게 중앙위원부를 구성하여 당 운영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⁷¹⁾ 그리고 그 해 11월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하여 각 단체에서 대표자를 뽑아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기왕에 자유당 간부를 각 단체대표들로 만드렸든 것인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69) 당시 총본부 총무였던 박봉애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박순천만 아니라면 누가 회장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회의장 뒤에서는 형사들이 돈과 압력으로 부인회 회원들을 이간하였고, 대회장 내에서는 회의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전국의 대표들이 이미 박순천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형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95~196쪽)

70) 이승만은 1952년 12월 9일 ‘자유당의 통일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노총이나 청년단·부인회 등이 각각 파당적 주의로 갈려 투쟁과 분란이 종종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인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반 박순천 씨를 회장으로 임원 개선을 반대한 부인회는 자유당과의 관계에 있어 간부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고 있다. 1500만 여성 집결단체로 자처하는 동 부인회의 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후방 여성의 정신무장 빈곤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함을 맹성하여야 할 것이다. 동 단체는 소수 간부여성의 정치적 발판이 아닌 바, 1500만 괴분자의 침투를 빙자하여 국권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함이 요청된다.”(『동아일보』, 1952년 12월 11일)

71) 오제연, 앞의 논문, 21쪽.

보면 충분한 효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 제도를 약간 변경해서 중앙위원회로 조직하기로 한 것인데 첫째 농민단체는 아직 조직이 未成이고 하로 속히 농민들이 이어나서 이 조직을 완성해야 할 것이며 또 노총은 그동안에 다소간 분류상태가 있어서 먼저 통일로 不日內에 양호한 효과가 날 것으로 보는 바이며, 부녀단체도 공고한 통일을 완수치 못한 것임으로 방금 여기 각 지도자들이 있어서 노력추진하는 중이며 不日中에 완전한 효과를 들게되기를 기대하는 바인데 각단체가 우선 통일이 완성된 뒤에는 위원제로 협의진행함으로써 자유당의 통일된 조직이 더욱 공고히 되며 이 당의 장구한 목적을 속히 도달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가 서로 합해 질수록 합동되기 어려운 문제가 없으므로 함께 모일수록 相互補缺해서 완전한 통합을 만들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서 막대한 정당을 이루워서 民國萬世福利의 토대를 만드려 보자는 것입니다.⁷²⁾

이승만이 부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단체별로, 그리고 자유당으로 통합할 것을 지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은 부산 정치파동으로 장기 집권과 정권 안정의 초석을 마련한 그가 본격적으로 자유당 조직 개편의 의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대중 단체들에 대한 통제력 또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자유당 중앙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는 것은 1953년 1월이었다. 이승만은 1월 28일 자유당 중앙당부에서 일할 대표위원과 위원을 발표하였는데, 대한농총은 채규항·최상석·박일래, 대한노총은 송원도·이진수·조경규, 대한부인회는 박현숙·황애덕·유각경⁷³⁾, 대한청년단은 윤재욱·유화청·진승국이였다.⁷⁴⁾

72) 「대한청년단 전국대회에 보내는 맺세-지」, 1952년 11월 11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1956, 105~107쪽.

73) 이승만은 박현숙, 황애덕, 유각경 등을 자유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부인회 내부에서 박순천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황애덕은 특별히 자유당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박현숙은 이후 1957년 자유당 사회부장을 지내고, 다음해 자유당 소속으로 4대 총선에 당선되었다. 유각경은 중앙당 무임소부장과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지내며 자유당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부정선거원흉자유당기획위원사건’ 관련자로 체포되어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승만이 자유당 중앙위원부를 조직함에 따라 입당한 유각경은 1959년 10월 무임소당무위원으로 선임, 1960년 1월 초 정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4부장 겸 기획위원위원회로 종사하였다. 그러나 유각경은 여성대표로서 기획위원회에 참석했으나 부정선거사실을 아는 바 없으며 부정하였다.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제단체는 자유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부에서 당 운영을 담당하였지만 이때에도 자유당 내에서 실권이 없었다. 중앙위원부 위원은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당의 실권은 여전히 족청계에서 장악하고 있었다.⁷⁵⁾

족청계는 1953년 끊임없이 비족청계와 대립하면서 자기 세력의 확장을 시도하다가⁷⁶⁾ 그 해 9월 10일 ‘일체의 파당요소 제거’라는 이승만의 특별담화에 의해 파당분자로 지목받았다.⁷⁷⁾ 족청계 숙청은 국민회의 이활, 대한노총의 이진수, 농민회의 김창수, 대한부인회의 박현숙 등이 배은희, 이갑성, 이기봉 등과 함께 주도를 하였다. 9월 16일 서울로의 환도를 전후해서 “족청계의 세력부식은 당의 분규를 만들고 통일정신을 미약하게 하고 있으니 고통을 참고 잘라내야 한다.”는 이승만의 지시가 발표되자 자유당 내 족청계 제거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⁷⁸⁾

1953년 휴전 무렵 이승만은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국민회, 한청의 간부들은 모두 자유당에 입당하라는 담화⁷⁹⁾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의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이승만은 자유당 내부 족청계 세력 일소라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각 단체들의 내부 갈등 관계를 지적하고, 해소할 것을 지시하는 담화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승만이 대한부인회로 하여금 자유당에 입당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사』 2권, 1962, 145쪽, 149쪽(윤정란, 앞의 논문, 328~329쪽, 재인용)]

74) 『동아일보』, 1953년 1월 30일. 국민회의 대표는 국민대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75) 서중석, 앞의 책, 1999, 507~508쪽.

76) 박태균, 앞의 논문, 192쪽.

77) 「일체의 파당요소 제거 자유당 국민회에 대하여」, 1953년 9월 10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130~131쪽.

78) 박태균, 앞의 논문, 194쪽.

79)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29쪽, 83쪽, 172쪽.

대한부인회로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성 초기부터 정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었다. 박순천은 대한부인회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어떠한 정당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승만의 자유당 입당 지시를 거부하였다.⁸⁰⁾ 같은 해 11월에 열린 대한부인회 전국대회에서는 ‘대한부인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운동과 사회사업만을 전념할 것을 천명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박순천의 반박성명을 더욱 뒷받침 해 주었다.⁸¹⁾

대한부인회의 자유당 입당 거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의미하였다. 비록 반관반민 단체로서 출발하고 여성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동원 활용되었지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여성단체로서의 목소리를 찾아가면서 일정 정도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제사회단체가 자율적 의지 하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대한부인회 회관이 자리하고 있던 건물 일체를 몰수하였다. 이 건물은 일제 시기에 애국부인회가 사용하던 건물로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부인회 서울시본부 총무를 지낸 이경화가 건물 한 쪽에 입주하여 살면서 입주자들과 투쟁한 끝에 1953년 초에야 찾아 임시로 대한부인회 회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박순천이 재선된 후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정치적 보복으로서 같은 해에 세들은 회관마저도 몰수해 버렸다.⁸²⁾ 2대 회장 선거 때부터 정부의 압력이 심해지고, 회관까지 빼앗기자 1953년 10월 13일에 열린 대한부인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종래의 회장제

80) 한국부인회총본부, 앞의 책, 83쪽 ; 박순천, 「나의 이력서 32」, 『한국일보』, 1974년 12월 22일.

81) 위의 책, 29쪽, 83쪽.

82) 1953년 이전에는 명동에 있던 연합신문사 옆 건물에 세 들어 방 2개를 사용하였다.(위의 책, 170~172쪽)

도를 폐지하고, 최고위원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박순천, 유각경, 박현숙, 이예행, 황애덕이 선출되었다.⁸³⁾

1954년 이승만은 대한부인회 임원 개선에 대한 발언을 하여 본격적으로 대한부인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년간 같은 임원들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총선 후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⁸⁴⁾ 같은 해 7월 19일 임원과 지도부를 다시 민선으로 선택하여 단체 내부의 분과를 타파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여⁸⁵⁾ 대한부인회 내부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발언들은 모두 8월에 열릴 대한부인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나온 것들로, 자신의 반대 세력인 박순천을 겨냥한 것이자, 국회의장이기봉의 부인인 박마리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박마리아는 1949년 4월 대한부인회 서울시 본부가 창립을 하자 박순천·유각경·박승호·최은희·한소제·김옥분 등과 함께 창설 위원이었고, 서울시 본부의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이기봉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김옥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서울시본부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정부 환도 이후 다시 대한부인회 활동을 재개하였다. 프란체스카와의 친분과 자유당의 제2인자 이기봉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은 반이승만세력인 박순천과의 알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부인회 내분을 지적하였고, 친여 세력인 박현

83) 『조선일보』, 1953년 10월 16일.

84) 「대한부인회 임원개선 문제에 대하여」, 1954년 4월 10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권, 1956, 19쪽.

85) “대한부인회는 나라일을 도우는 목적에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녀들이 이 통일기관을 달해서 진행하기로 조직이 된 것인데 그 중간에 사사부분들이 정치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표면으로는 통일을 도우는 것처럼 만들고 속으로는 탄부분을 세워서 부녀단체가 몇가지로 분립되기에 이르렀든 것이다. 전국 부인들이 지금 와서 이 情景을 깨달은 이후로는 즉시 대궐기해서 이런 분렬주의를 다 타파하고 통일 단결을 완성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정신통일을 먼저 이루어놉코 …(중략)…그 결과로는 필경 임원과 지도자들을 다시 민선으로 선택해서 사심 가진 사람들은 다 제쳐놉코 애국성심으로 만든 희생을 달게 하려는 지도자를 택해다가 중앙과 지방지도자 책임을 맡겨가져야 될것이니.”(「대한부인회 발전에 대하여」, 1954년 7월 19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권, 1956, 211쪽)

숙, 유각경 등을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박순천은 대한부인회 내부 권력 관계 속에서도 그 지도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즉 대한부인회의 주도권은 오히려 친여당 세력보다는 박순천을 위주로 하는 중립적 또는 무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박마리아와 자유당 간부 부인들이 부인회에 참여하면서 박순천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결국 박순천은 정기 총회가 열리기 전 대한부인회 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였다.⁸⁶⁾

86) 한국부인회 총본부, 앞의 책, 178~180쪽, 197쪽. 한편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3대 총선에서 박순천은 무소속으로 종로갑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제2당이면서 유일한 야당인 민국당이 15석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야권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순천은 원내 자유당 의원이었던 장면, 곽상훈 등과 함께 민주당 신파로서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55년 9월 18일 열린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그는 당 고문 겸 중앙위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IV. 축첩 반대 운동과 간통쌍벌죄 제정

이승만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비호아래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었다. 대한부인회 또한 정부의 정책에 동원되거나 보조를 맞추면서 정권과 반관반민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압력단체로서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성 정치력의 형성을 위한 조직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부터 행정이나 입법 활동의 참여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꾀했던 여성 지도자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성의 권익에 대한 법률적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이 대한부인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축첩 반대 운동과 간통쌍벌죄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었다.

축첩 반대 운동은 일제시대 근우회 사업의 하나일 정도로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축첩은 여전히 사회의 중요 문제로 남아있었다.⁸⁷⁾ 정부 수립 이후 축첩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49년 7월 국회에서 「공무원법」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임용자격 결격 사유에 ‘축첩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정준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였다. 수정안은 “축첩생활이란 계급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여⁸⁸⁾ 축첩이 봉건적 잔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법률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사회 정화 내지 개혁운동에 맡겨야 할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부결되었다.⁸⁹⁾

이 안이 부결되자, 대한부인회를 주축으로 700~800여 명의 여성들이 1949

87) 정현주, 앞의 책, 135쪽.

88) 「초대 제4회 15차 국회속기록」, 1949년 7월 21일 ; 『경향신문』, 1949년 7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 2000, 218~219쪽).

89) 이임하, 앞의 책, 190쪽.

년 7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공관 앞에 모여 축첩 공무원 추방을 요구하며 켈기대회를 가졌다. 여성들은 “축첩 공무원은 물러나라”, “아내여! 남편에게 자기 딸을 첩이나 기생으로 내어 놓겠는가 물어보라”, “여인의 정조가 아름다우면 사나이도 지키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적은 전단지를 만들어 나눠 가졌다.⁹⁰⁾

먼저 박순천 회장의 연설이 있었다. 그는 축첩이 여성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하였다. “문명국가로서 축첩제도가 존속하여 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수치”이고, “축첩을 반대하는 법안이 그대로 묵살되었으니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결국 축첩제도를 법률로써 묵인하게 된 셈이요, 여성 전체에 대한 일대 모욕이다. 이에 우리는 총궐기하여 축첩제도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축첩을 인정치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언명하였다.

다음으로 김분옥은 ‘생활개선은 가정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의 강연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들이 축첩 폐지를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생활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운동가들과 부녀행정 담당자들은 살림의 근대화를 추구하고 여성들의 기존 생활관습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생활로 바꾸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동시에 부부관계, 고부관계, 자녀양육 등 가정 내부 생활 개혁에 있어서도 민주화되고 평등해야 하며, 불합리한 관습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다.⁹¹⁾ 따라서 축첩은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부부관계의 평등을 확보하고,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했다.

90) 『경향신문』, 1949년 7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 305~306쪽) ; 『조선일보』, 1949년 7월 29일.

91) 정현주, 앞의 책, 135쪽.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축첩 공무원 숙청 제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⁹²⁾

금번 국회에서 연 3일 걸쳐 토의된 축첩문제 부결에 대하여 우리 여성은 항의한다. 국가가 초비상시기에 있는 국정을 알고 여성문제는 次期를 기다리고 자숙태도로 함구불언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82 의원이 찬성 제의하여 무기명 투표에서는 53명의 찬성이라는 기묘한 숫자로 부결된 축첩이란 문제는 우리 여성의 울분이 장구한 시일에 억압을 당한 우리들에게 짓궂은 충동이라고 본다. 우리 여성을 옹호한다고 이 문제를 제기한 82 의원들은 과연 전부가 첩이 없는 분들이었으며 이를 부결한 분들은 첩이 있단 말인가 의심하는 바이다. 제공들이 자기의 연봉을 가결할 때의 열과 일사천리적 만장일치는 가관이었는데 국민의 반수인 우리 여성들은 제공들을 선출할 때 결코 심심풀이로 炎天에 그늘 밑에서 부채질하는 격으로 여성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⁹³⁾

결의문 낭독 후 대회 참가자 전원이 중앙청으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위의 결의문을 전달하며 축첩자 숙청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1시경 해산하였다. 이 궐기대회는 남성들의 축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성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 중심의 보수적, 폐쇄적 사회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의 부재는 여성들의 분출되는 욕구가 사회나 정치체계에 정당하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단체라는 수단을 통해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궐기대회의 규모와 여파가 어떠했는지는 1949년 10월 27일 임영신을 주축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한 ‘축첩 공무원 엄단을 요구하는 건의서’

92) 『경향신문』, 1949년 7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 305~306쪽).

93) 『자유신문』, 1949년 7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 305~306쪽).

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⁹⁴⁾ 대한부인회는 계속해서 활발한 축첩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단체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11월 4일에는 각 여성단체의 명의로 대통령에게 축첩공무원 추방을 건의하였다.⁹⁵⁾ 12월 11일 이승만은 축첩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여 여성단체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여권옹호대책위원회·대한부인회·여자국민당·여자기독교청년회·한국기독교연합회 등의 여성 단체가 보낸 건의서를 언급하며,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민 전체에게 이 정신을 강조하고 나아가 법을 만들어 반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⁹⁶⁾ 대한부인회를 위시한 여성단체들의 축첩반대운동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축첩방지법 제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승만의 축첩 공무원 방지에 관한 입법 의지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으로 축첩 공무원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1950년에는 250명의 축첩 경관이 적발되어 파면 당하였으며,⁹⁷⁾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내내 이어져 공무원 감원 문제가 제기될

94) “공무원은 국민의 儀表가 되어야 할 것에 당연하니 그 내용 전형에 있어서는(헌직자도 포함) 그 신분 조사를 신중히 하여 축첩을 亂行하여 우리 민주제도의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자는 엄중 제지하는 방침을 취하여 주시오.” [『경향신문』, 1949년 10월 28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4, 2000, 621~622쪽)]

95) 『조선일보』, 1949년 11월 11일.

96) “1남 1녀로 가정을 이루어 국가 사회에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개명한 나라의 동일한 법이요, 우리 나라에서도 자고로 부부의 배필을 존중하는 것이 五倫에 들게되어 相對如賓으로 내외간의 동등권리를 누리는 것은 소위 士夫 가정에 가장 중대한 예절로 여기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이르러 소실을 두는 습관이 생겨서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이 풍속화되어 오직 부인들만이 정조를 지키고 남자는 정조를 지키는 법이나 예의가 없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회도덕상 불공평한 일일뿐만 아니라 일남다처의 비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개명한 나라의 국법으로 이러한 결점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다같이 그 수치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근자 각 부인단체에서 연합해서 여권옹호대책위원회·대한부인회·여자국민당·여자기독교청년회·한국기독교연합회 등 연명으로 나에게 그에 대한 건의서가 왔고 또 그 대표들이 친히 진정하기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민 전체에게 이 정신을 강조하고 나아가 법을 만들어 반포코자 하는 바이니, 이 법령이 공포된 후에 첩을 새로 두거나 小室置家하는 자는 남녀를 동일하게 범법자로 인정할 것이니 이후로는 이 폐습을 막아서 우선 국가의 명망을 중히 여기며, 또 우리가 유래로 존중해 오던 1남 1녀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자의 지위를 높여서 첩이나 소실이라는 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 극히 주의해서 욕스러운 폐습을 영영 막아서 우리가 범한 오랜 치욕을 삭제함이 개명한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직책일 것이다.” [『자유신문』, 1949년 12월 11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 2001, 489쪽) ; 『동아일보』, 1949년 12월 11일]

97) 『연합신문』, 1950년 6월 24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7, 2001, 765쪽).

때마다 감원의 제 일차 대상은 축첩 공무원이었다.⁹⁸⁾

한편 1950년 5월 30일에 있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부인회를 주축으로 한 여성계는 축첩자에 대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2월 6일 대한부인회 전남도본부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과 공무원의 축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첩자에 대해 투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지침을 각 시·군 지부에 시달하여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⁹⁹⁾ 2월 14일 사회부의 각 도 부녀계장 회의에서는 전남지방을 위시한 각 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첩자에게 투표를 거부하는 부녀계통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¹⁰⁰⁾ 이와 같이 축첩자에 대한 투표 거부는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축첩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본처와 첩으로 나뉘어 서로를 질시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고, 기혼여성의 지위 뿐 아니라 첩이 되는 여성의 지위 또한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고, 결국은 남성에게 예속되는 삶을 강요하게 했다. 따라서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의 축첩 반대 운동은 축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축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행사하도록 하는 시발점이었다.¹⁰¹⁾ 대한부인회는 반관반민의 여성운동조직으로서 조직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교적 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것이 뿌리 깊은 축첩 제도를 추방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하고 정부의 입법 추진을 이끌어내는

98) 그러나 정부의 축첩 문제에 대한 대책은 첩을 둔 자는 최고 2년형에 또는 1년간의 중노동에 처한 북한의 경우에 비해 적발된 축첩경찰관이나 군인,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고 말았다. [이문웅,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통유교문화 :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149쪽(이임하, 앞의 책, 190~191쪽, 재인용)]

99) 『자유신문』, 1950년 2월 9일.

100) 『동아일보』, 1950년 2월 15일.

101) 축첩반대운동은 1954년에도 이어져 8월 25, 26일 양일간 열린 대한부인회 정기 총회에서는 ‘공무원 축첩반대’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54년 8월 28일)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물론 당시에는 축첩의 관행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었지만 그 부도덕성이 크게 부각되었다.¹⁰²⁾ 그리고 축첩 반대 운동은 박순천이 간통쌍벌죄를 입법화하는 활동¹⁰³⁾을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는 바로 간통문제였다. 이 문제는 여자만 처벌할 것인가, 남녀 모두 처벌할 것인가, 단지 도의적 문제로만 돌릴 것인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다.¹⁰⁴⁾ 기본적으로 간통문제는 축첩을 간통죄로 고발하여 법적으로 남성들에게 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던 축첩의 인습을 제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주요 이슈였다. 그리하여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는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트럭에 현수막을 달고 시위를 벌이면서 간통쌍벌죄 법 제정문제의 중요성을 알렸다.¹⁰⁵⁾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단체에 참여하고, 단체는 그러한 여성들을 대표하여

102) 최정순, 앞의 논문, 85쪽.

103) 박순천은 남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될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처 이외의 여자와 계속해 온 부처관계에 대해서는 간통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조선일보』, 1953년 6월 30일) 이외에도 박순천은 2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로기준법 작성에 참여하였다. 그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생리 1일 유급 휴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재석 의원 100인 가운데 가 85표, 부에 1표도 없이 통과되었다.

104) 여자만 처벌하자는 이유는 여성은 남성과 생리적·심리적으로 다르고, 여성의 마음은 편파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무조건 여성만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목인한 때, 유기한 때, 학대한 때, 혹은 남편이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남편의 사전허가가 있을 때는 죄가 없으며, 또 남편이 이를 안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신문』, 1949년 11월 17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 208쪽)] 남녀 모두 처벌하자는 이유는 헌법상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고, 남녀 모두 처벌하지 말자는 이유는 간통이란 것이 법률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단지 도의적 문제로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국도신문』, 1949년 11월 17일(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책, 168쪽)]

105) 대한부인회를 비롯하여 대한YWCA, 여성문제연구원 등은 트럭 위에 플래카드를 달고 시가지를 누비며 캠페인을 벌였다. 1952년 11월에는 국회의원이었던 박순천과 임영신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한국부인회총본부, 앞의 책, 28쪽, 243쪽, 456쪽; 정현주, 앞의 책, 228쪽)

축척과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임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 건설에 있어 여성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 대한부인회가 있었고, 대한부인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대변자로서 여성 공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성계는 민법의 친족상속편¹⁰⁶⁾ 개정에도 관심을 보였다. 종래의 민법은 일본 민법¹⁰⁷⁾을 의용하는 것이 많았고, 특히 친족상속편은 종법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 시대 이래의 관습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¹⁰⁸⁾ 여성의 권리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거나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며, 재산상속은 남계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은 아예 배제되어 있었다.

이태영을 중심으로 여성계는 방안을 모색하여 첫째, 민법 제정에 대해 여성 단체의 이름으로 진정서와 건의문을 내서 민법의 여성차별 조항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둘째, 여성의 권리를 반영한 민법의 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¹⁰⁹⁾ 대한부인회는 대한YWCA,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여자국민당, 여성문제연구원, 대한조산원회, 국방부녀회, 애린선교단 등의 단체와 연합하여 1953년 4월 여성 단체의 이름으로 진정서와 건의문을 작성할 때 참여하였다.¹¹⁰⁾ 그러나 1953년 여성계의 친족상속편 개정 운동은 성공

106) 민법 중에 친족상속제 규정은 흔히 가족법이라고 한다. ‘가족법’이라는 명칭은 1950년대 내내 가족법 개정 시도를 주도했던 이태영이 1957~58년에 미국 국무성의 초청으로 법률연수 시 미국에서 ‘패밀리코트(family court)’, ‘패밀리로우(family law)’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귀국 후 스승이었던 정광현 서울대 교수와 의논하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을 가족법이라 부르면서 쓰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운동을 가족법개정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정현주, 앞의 책, 214쪽)

107) 일제 시대에 도입된 민법 중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제도로는 처의 무능력자제도, 신고에 의한 협의이혼제, 호주상속제도, 일본식 서양자제도(婿養子制度), 모(母)의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었다.(정현주, 앞의 책, 216쪽)

108) 이태영,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992, 22쪽.

109) 위의 책, 40쪽.

110) 『연합신문』, 1953년 4월 13일(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 2008, 88~89쪽).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의 내용은 호주권 관계, 혼인관계, 친권 문제, 양자 문제, 호주상속인 순위문제, 재산

하지 못한 채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대한부인회는 비록 민법의 친족상속편 개정 시도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연대활동을 통해 법 개정 시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대중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운동의 주도세력이 되어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시키도록 하는 등 여론 형성을 도모하였다.

여성의 문제는 특정 성(性)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척도가 된다. 전쟁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자신들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비록 느리긴 하지만, 그들 스스로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과 여성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대한부인회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 문제, 유류분(遺留分) 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전문은 이태영, 위의 책, 395~404쪽 참고.

V. 맺음말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 기존 우익 대중 단체들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한부인회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 1949년 2월 독립촉성애국부인회와 서울시부녀회를 통합하여 반관반민 단체로서 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는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재편하는 방식으로 결성되었다. 동시에 전국적 조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 여성 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대중을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치 참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대한부인회의 지도자들에게 여성 대중과의 결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이처럼 전국적 조직화는 여성 대중의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했다. 그런데 전국적 조직화 작업은 막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중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사무·행정적 처리에 대한 경험과 경제적 기반도 없는 여성들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배경이었다. 재정은 단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사업을 계획·시행하는데 필수적 요소이지만, 심한 의존도는 자칫 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었다. 대한부인회는 이러한 반관반민 단체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여성단체로서의 이념과 활력은 국가라는 거대 담론의 영향권 하에 편입되었다.

1950년대 반관반민 단체들의 주된 정치적 활동은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부인회는 활동 초기부터 자유당의 예속단체였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기존에는 자유당 창당의 주도세력이 대중단체 중심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것은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세력이었으며, 대중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부인회가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독점적 권력 획득에 동원 조직이자 보조 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축첩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간통 쌍벌죄 제정 및 민법의 친족상속편 개정 시도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반대세력으로 돌아선 박순천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부인회를 가만두지 않았다. 1952년 2대 회장 선거가 있던 전국대회에서는 경찰을 동원하여 그를 회장으로 뽑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195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인회의 임원 선거나 조직 개편에 대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한부인회가 자유당으로의 입당을 거부하자 부인회 회관이 있던 건물을 몰수하였다. 이 무렵부터 박마리아가 부인회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점차 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단체 활동에 대한 결정은 폐쇄적이고 하향식일 뿐 아니라 여성 단체로서의 독자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갔다. 결국 1954년 박순천이 사퇴하면서 대한부인회는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초기 대한부인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분명 반관반민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반관반민 단체는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조직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므로 국가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지니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반관반민 단체가 국가 권력에 예속적인 직무적 책임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방향으로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의 요구를 지시하고 실천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익집단의 특성도 갖는 셈이다. 대한부인회는 반관반민 단체로 출발했던 만큼 국가의 정책 및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들을 동

원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원과 활용의 관계 속에서도 여성을 위한 이익 단체로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승만 정권의 권력 장악력이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승만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어 의제설정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이익집단은 재정력과 응집력이 약하며 특히 자주성이 취약하여 정부에 의해 하향적으로 조직되거나 각종 통제가 가해지는 등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한부인회의 축첩반대운동, 간통쌍벌죄 입법화 및 친족상속법 개정 시도 등의 활동은 이 단체가 단순히 국가의 동원기제였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박순천을 계속해서 단체 대표로 선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승만의 통제력이 대한부인회에 절대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승만은 이 시기에 공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단체를 동원하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중단체 지도자들 중에는 친이승만 세력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며, 그 내부에는 파벌도 존재하였고, 이승만은 이것을 늘 경계하였다. 그리고 자유당 창당이나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이승만은 이범석의 족청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중단체에 대해 일률적인 통제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나서려는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

나 기존 남성 중심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남성 우월 의식을 주입시켰고, 관습에 따라 살 것을 강요하였다. 사회의 저변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은 여성단체를 통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한부인회가 주도한 축척반대운동은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의 수용자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더구나 이승만의 자유당 입당 지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제사회단체가 자율적 의지 하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반관반민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이승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력에의 예속이라는 여성단체의 한계는 이후 한국사회 여성들의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부인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에 다원성이 나름대로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은 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자, 그 자체가 국민 형성의 결정적 계기였다. 즉 국민적 일체감 형성의 계기로서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상대적 존재로서의 자기 위치를 설정하게끔 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국가적 권위는 시민사회에 강력한 침투력을 행사하면서 확립되었다. 전쟁이 한국 사회의 다원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쟁 후 국가는 대중의 능동성을 제고하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했지만, 이승만 정권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

서 오히려 대중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대중은 그 다윈성의 경험을 잊지 않았고, 자유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그 욕구는 4월 혁명으로 분출되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신문·잡지〉

국사편찬위원회편, 『자료대한민국사』

『경향신문』, 『국도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정부간행물 및 기타 자료〉

강진화 편, 『대한민국건국10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2, 공보처, 1956

국회사무처, 『국회사』 1, 국회사무처 위원국자료편찬과, 1971

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녀국, 『새살림』, 1947

대구광역시, 『대구여성백서』, 대구광역시, 2001

보건사회부, 『부녀행정 40년사』, 1987

부산광역시, 『부산여성백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1999

서울특별시, 『서울여성백서』, 1998

인천광역시, 『인천여성백서』, 2001

전라남도, 『전남여성 100년』, 전라남도, 2003

전라북도, 『전북 여성발전 50년』,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 2000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단체활동사』, 1996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공편,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 2002

〈단체사 및 회고록〉

- 박순천,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4
- 변희남, 『부녀복지행정 외길 40년』, 홍익재, 1989
- 이범석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 이태영,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992
- 최은희, 『여성전진70년』,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1
-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 한밤의 소리사, 1986
-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2. 연구저서

- 김교식 저, 『운명의 여인』, 마당문고사, 1984
- 김상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사, 1977
- 김석영, 『여류명사 30인 선집-인물평판기』, 송문사, 1953
-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경인문화사, 2005
- 김숙자, 『한국여성명사집』, 입체문화사, 1960
- 김원홍·김혜영·김은경 공저,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 박용만 저, 『(제1공화국)경무대 비화』, 내외신서, 1986
-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편, 『임시수도천일』 상·하, 부산일보사, 1984
- 손충무 저, 『경무대의 여인들 :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 한진출판사, 1980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996
- 안용식 편, 『대한민국 관료연구』 1·2·3,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 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2004
- 이효재·김주숙 공저, 『한국 여성의 지위』,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76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96
-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단체 조직과 운영』, 한국여성개발원, 1991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단체지원사업』, 한국여성개발원,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 한철영, 『한국의 인물 : 제1선 50인선』, 문화춘추사, 1954
- 현대한국인물평론사 편저, 『현대한국여성사』, 현대한국인물평론사, 1990

3. 연구논문

- 강행숙, 「제1공화국기 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숭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수자, 「이승만의 여당 결성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1집, 한울, 2004

- 김수자, 「1948~1953년 이승만의 권력강화와 국민회 활용」,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55, 2005
- 김영명,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1991
-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은숙, 「여성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활동」, 경북대학교 도시행정 박사학위논문, 1999
- 박태균, 「1954년 제3대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화-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17, 1995
- 백영주·김수자,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5
- 백운선, 「이승만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 과정 : 제1공화국」, 『사상과 정책』 20, 경향신문사, 1988
- 신영숙, 「여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여성과 한국사회』 (개정판), 사회문화연구소, 1994
- 신영숙,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15권 1호, 2001
- 안상정, 「민족청년단의 조직과정과 활동」,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양동숙,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연정은, 「제2대 국회 내 공화구락부 - 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오제연, 「1956-1960년 자유당 과두체제 형성과 운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성혜, 「여성단체의 이중구조 : 국가의 가부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1992
- 윤정란, 「제2공화국의 여성정책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 이진경, 「조선민족청년단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임송자, 「1950년대 노동조직과 이승만·자유당권력과의 관계」,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30호, 2008
- 임종명, 「조선 민족 청년단 연구 : 미군정의 ‘향후 한국의 주도세력 양성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정병준, 「박마리아 :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친일과 권력욕의 화신」, 『청산하지 못한 역사 :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 60인 2권』, 청년사, 1994
-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 8』 제28집 2호, 2007
- 정충량·이효재,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논총』 14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1969
- 정현주,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여성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 현대여성단체의 기원」, 『유관순연구』 제5집,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 최정순, 「박순천 정치리더십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8
- 최한수, 「민주당의 성립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정치적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4

하유식, 「이승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 -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3호, 부경역사연구소, 1997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
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Early Korea Women's Association in 1949~1954

Song, Ji-Yun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early Korea Women's Association(1949~1954) in relationships with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It also reviews afresh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for the extension of women's rights to judge its political autonomy.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49. The association was the pivot of right-wing women's organizations in the 1950'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was organized nationwide by administrative support. The early working period of the association was interlinked with the very unusual circumstances, the Korean War. The war drove Korean society in the 1950's into austerity and chaos, and the nation took control of even personal inner side as well as its society. The war also had an effect on women and left them war victims. Women became aware of their own issues and took action against Korean society even if the war turned the society more rightward, conservative and male-dominated.

In this period, public groups were regarded as subordinate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launch of the *Lee's* Administration because the government mobilized them as means of reinforcement and stabilization of itself. Therefore, the public groups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leading group of forming the Liberal Party. However, they didn't positively take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Party. Moreover, they weren't subject to political authority at the time of the early *Lee's*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association was a mobilization structure and subsidiary organization to secure legitimacy and exclusive power for the *Lee's* Regime, it didn't only perform compulsory duty for the nation. It refused the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common interests of affiliated members in the association and resisted the regime's pressure to join the Liberal Party as they announced a refutation statement. In addition, the association issued and practiced special demand against Korean society as the members developed the movement to protest concubinage and ask for legislation about a dual punishment of adultery. As a result, it was able to be free from political authority.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couldn't help disappearing due to the limit of the origin that it was born as a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Nevertheless, it was meaningful that it showed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as women. In other words, it represented the development of women's awareness to take action as an active and main agent.

The reason why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could maintain its political autonomy was that *Lee* didn't get firm political supporters in the early 1950's. *Lee* demanded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groups and always took precautions against factions within the groups although *Lee* depended on the public groups as a power base. It means that *Lee* didn't have full control of the public groups.

The association revolted against the *Lee's* Administration and took part in movements to abolish bad customs of Korean society. It stood for the existence of pluralism in Korean society in the 1950's. However, the stronger anticommunism after the Korean War took effect, the more difficult pluralism was to exist. The national hegemony became greatly powerful.

In the end, people struggled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this was the April Revolution.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reflected the dynamics of women's society. Furthermore, It would be one of the mainspring of the April Revolution.